

【제4기 서대문구 주민인권학교】

인권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강의기간 : 2014년 10월 20일 ~ 10월 28일

▣ 강의장소 :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

주최



서대문구

주관



인권재단

- 자료집 순서 -

1. 강의 일정

2. 강사 소개

3. 사람답게 산다는 것 1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4. 인권의 생활화 19

박경서/ 前 대한민국 인권대사

5. 대한민국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까? 41

오건호/ 사회학 박사

6. 서대문구에 세우는 인권도시 51

서해성/ 소설가

- 강의 일정 -

구 분	강의명	강사명	소속/직위
10/20 (월)	사람답게 산다는 것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10/21 (화)	인권의 생활화	박경서	前 대한민국 인권대사
10/27 (월)	대한민국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까?	오건호	서울대 사회학 박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 운영위원장
10/28 (화)	서대문구에 세우는 인권도시	서해성	소설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 강사 소개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인권운동가. 다양한 인권현안에 대해서도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광운대 외래교수.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을 썼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청소년 인권학교>는 함께 썼다. <리영희 프리즘>과 <기억하라, 연대하라> 등의 책을 기획했다.

○박경서

서울대학교 교수, 크리스천 아카데미 부원장,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 국장과 아시아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였다. 황조근정훈장을 비롯하여 네팔·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 인권상 및 공로패 등을 받았다. 국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UN의 세계 유엔 인권도시 추진위 위원장, 유엔 인권정책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건호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민주노총 정책부장, 민주노동당 원내 정책전문위원으로 일을 했고 공공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에서 공공부문, 국가재정 등을 연구했다. 현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가 있다.

○서해성

1989년 <실천문학>을 통해 '살아오는 새벽'으로 데뷔한 소설가. '시민방송', '북스타트 운동', '기적의 도서관', '고구려!', '광복 60주년 사진전' 등을 기획·연출했다. 한신대, 성공회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 강의는 시 한 편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함께 읽어 볼까요?

남으로 창을 내겠소.

발이 한참같이

팽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상용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입니다. 1934년에 발표했으니, 80년 된 시네요. 하지만 사람 사는 이치야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겠죠. 시인은 그저 남쪽으로 난 창문만 있어도, 제 몸 움직여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하답니다. 이웃들과 함께 강냉이라도 나누며 사는 삶이 행복하답니다.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누군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저 웃기만 해도 됩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답니다.

김상용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평범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행복을 위해 산다

삶은 때론 고통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택(苦海)’라는 말도 있죠. 마치 고통의 바다에 빠진 것처럼 험하고 거친 일을 많이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상용 시인은 행복한 삶의 근거로 노동을 꼽고 있지만, 노동이 꼭 보람과 기쁨만 주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인류 역사와 문명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이라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 지켜워도 참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때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맞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건 만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답변이 궁색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답은 “태어났으니까” “그냥” 같은 답이겠죠. 하지만 이는 너무 소극적·수동적이잖아요. 어차피 한 번 뿐인 삶인데, 목숨이 주어졌으니 산다는 답변에만 머무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아가야 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유를 찾곤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정해 두고 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도 있겠네요. 사람마다 살아야 할 까닭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각기 다른 답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까닭입니다. 김상용 시인의 시처럼 소박한 것에서 느낄 수도 있고,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는 커다란 포부여도 좋습니다. 하기 싫고 귀찮은 공부를 하는 까닭도 나중에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겠죠. 하루의 고단한 노동을 견딜 수 있는 것도 나와 가족의 행복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나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좋은 영화나 그림을 보았을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풍경 좋은 곳을 찾았을 때, 맛난 것을 먹을 때, 또는 그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폭 쉴 때, 때론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때…….

이런 때의 느낌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세상을 사는 까닭입

니다. 인생의 목표죠.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나중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인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곧,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거꾸로 생각해봐도 좋겠네요. 만약 뭔가가 없어진다면 부족하게 되면 사람답지 못하게 될까를 생각해봐도 좋겠어요. 당장 떠오르는 건 의식주(衣食住)겠죠. 입고 먹고 자는 일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니까요. 혈벗거나 굶주리거나 잘 곳이 없다면 진짜 불행하겠죠. 물론 필요한 게 의식주만은 아닙니다. 교육도 받아야 하고, 일 자리도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적당히 쉬거나 문화생활도 할 수 있어야 하죠.

자유도 물론 중요하죠. 어떤 자유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몇가지만 꼽아봐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유는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를 수도 있죠. 자유는 역설적으로 자유가 없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신체의 자유만 해도 그래요.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형벌로 삼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빼앗겼을 때의 고통 때문이지요. 이런 형벌을 자유형(自由刑)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얼마나 소중한 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종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심지어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유럽의 역사가 특히 그랬죠. 독일의 30년 전쟁,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 네덜란드 독립 전쟁(80년 전쟁) 등 종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일이 많았답니다. 물이나 공기는 물론이고, 전기, 통신, 교통 같은 것도 꼭 필요하지요. 안전도 물론이지요.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더구나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많답니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그런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각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구해야 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보통은 필요한 것들을 돈을 주고 사야하죠. 그러니 돈이 있으면 살만하겠지만,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못살게 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게으른 적도 없고,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열심히 일하면서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아예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나이가 적거나 너무 많아서, 아니면 아파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불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산층이나 부자라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연재해나 재난, 안전사고 같은 것이 생기면, 개인의 노력만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 후쿠시마처럼 핵발전소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죠? 핵 방사능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 <해운대>에서처럼 쓰나미라도 닥치면 또 어떨까요?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돈만 쫓는 천박한 자본주의 풍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은 생각지 않고 엉터리 날림으로 짓거나 부실한 부분이 적지 않아요. 멸종해보이던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 건물이 붕괴된 적도 있었고, 여객선이 침몰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더라도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처럼 짐승을 해치는 병이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1997년 구제금융 사태처럼 갑자기 경제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터진다면, 아무리 개인이 가족과 함께 열심히 산다고 해도 막기 어려울 거예요. 혼자만의 노력으로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힘을 지닌 특별한 조직을 생각해 냈어요. 바로 국가예요. 재해나 전염병을 예방하고, 재난 구조나 일자리 만들기 등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찬 일들, 그러나 꼭 필요한 일들을 맡도록 하는 거죠. 개인이 너무 비참하거나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거죠. 국가가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국가에 협조하고, 세금을 내거나 국방의 의무도 다하는 거예요.

왕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거나, 국가 지도자만 최고 존엄으로 대접받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인인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합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고위 법인 헌법에 정해두고,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결코 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의 지배를 받게 하는 나라들이죠.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거의 100년 동안 진행된 혁명의 역사를 통해 공화국을 만들었고,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식민지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의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근대국가는 시민들이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런 노력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꼭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 정해 두었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민은 권리를 갖고 있고, 국가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명확한 규정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인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이 헌법 조항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원칙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인 만큼, 최고위법인 헌법에 적어 두어, 국가와 시민들이 함께 늘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인권’입니다.

인권, 행복한 삶을 위한 가치이며 수단

배운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인권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였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사회』 38쪽과 39쪽에 나온 설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배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 즉 인권을 가진다.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38쪽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성별, 국적, 인종 등에 관계없이 존중을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는데, 인권은 타인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남에게 넘겨 줄 수 없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39쪽

방금 읽어 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인권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인권은 인간 누구나의 것이라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 '~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참정권이 그래요. 선량하지 못한 사람도,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도 선거권, 피선거권을 모두 갖고 있어요. 정치적 의식이 낮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갖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인권은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에요.

둘째, 인권의 쓸모는 뭘까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살아”가거나, “존중을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시나 모욕을 당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란 설명이에요. 이게 바로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까닭이에요. 인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짝하기 때문이지요.

셋째,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무엇, 누려야 할 무엇은 바로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뜻도 있고, 또한 갖고 있거나 누리는 게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뜻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세 가지 요소를 합해 보면, 인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교과서적인 정의를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로 가볼까요. 함께 볼 책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도덕 교과서(천재교육)입니다. 이 책에는 인권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89쪽의 설명을 함께 보도록 하죠.

인권은 단순히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로서의 의미가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기본적인 필요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 한 인간의 삶이 기본적인 생활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려는 것이다. 이때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가 된다.

- 중학교 3학년 『도덕』 89쪽

누구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니, 인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되죠. 단

순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면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되기 때문에, 인권은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사람다움을 실현할 권리가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면, 인권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은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겨우 맛보기 수준에서만 가르칠 뿐이고, 인권에 대해 따로 공부할만한 책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홀대를 당하고 있기도 해요.

인권에 대해 공부하는 것, 인권교육을 받는 것은 인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인권이 뭘지 알아야,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인권을 보장받는 것도,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보통의 경우, 공부하는 시험을 위한 것이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직을 하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죠. 치열한 경쟁을 앞둔 공부는 부담스럽겠지만, 인권 공부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얼마나 잘 외웠나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성적을 매기는 것도 아니니까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 그 원리를 적용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당연히 누릴 권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인권이란 말은 19세기에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Rights of Man’(지금은 ‘Rights of Man’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Human Rights’라고 쓴답니다. 인권이 마치 남성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있던 한자 사람 인(人)자에 권세 권(權)자를 붙여서 만든 단어지요. 이 말은 일본을 넘어 한국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에서도 함께 쓴답니다. 영어 단어 man을 인(人)으로 right를 권(權)으로 번역한 거죠.

‘Rights of Man’을 그냥 인권이라고만 번역한 것은 좀 아쉬운 일입니다. 권(權)이란 한자어는 원래 저울추를 의미합니다. 저울추를 달아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권력 작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권력이나 권세는 보통의 경우 억압하는 성격이 강하고, 권력 작용을 통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right를 그냥 권(權)으로만 번역한 것은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권(權)이라고 하면,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것이란 조금은 배타적인 의미로 읽히지만, 영어 단어 right는 권(權)과는 좀 다른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는 물론, 정의나 옳은 것으로 번역할 수 있고, 형용사로는 ‘옳은’ ‘올바른’ ‘맞는’ 등의 뜻이 있고, 부사로도 ‘정확히’ ‘바로’ ‘완전히’ ‘옳게’ ‘맞게’ 등의 뜻도 갖고 있

어요. 그러니까 ‘Rights of Man’은 그냥 인권의 권리이기보다는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게 올바르고, 권리를 누리는 게 당연하고, 맞다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권학자 조효제 선생님은 ‘인권’이란 번역보다 옳다는 의미를 강조해서 옳을 의(義) 자를 넣어 ‘의권(義權)’이라고 쓰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인권’이란 말이 굳어져 버렸으니, 다른 말로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또한 ‘의권(義權)’이라고 쓴다면, 워낙 “네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네 권리를 주장하라!”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인권을 마치 의무를 이행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인권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사람의 권리이니, 당연히 사람만이 갖는 권리겠죠. 그럼,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들도 당연히 권리가 있겠죠. 동물들의 권리는 ‘동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 너무 뻔한 답이지만,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그것 말고 사람이 유독 귀한 존재여야 할 다른 까닭은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릇 모든 생명이 다 귀하지만, 사람은 문명을 창조했고, 문화를 갖고 있다는 남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동족을 죽이고, 때론 인종청소를 할 만큼 잔혹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그 잔혹함을 성찰하기도 하고, 잔혹한 짓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야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일도 사람에게서만 가능합니다.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만이 특별한 동물이라고 굳이 강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하고 있는 저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모두 사람이니, 일단은 사람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자는 차원 정도로 여겨주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능력이 사람이 아닌 다른 종의 동물들에게까지, 나아가 식물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까지 그 관심을 넓혀 간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될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사람의 발명품

인권이란 말은 원래부터 있던 말이 아닙니다. 권리란 것이 있었다면 기껏해야 왕의 권리나 있었을 뿐이니까요. 왕에게만 있던 권리를 왕이 아닌 사람들, 처음에는 귀족, 그 다음에는 재산을 가진 자산계급, 그리고 마침내 노동자와 여성과 다른 인종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로까지 발전해온 겁니다. 인권에 대해 ‘천부인권(天賦人權)’이란 말을 자주 하니, 인권이란 것이 하늘(하느님)이 준 선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하늘이 준 선물처럼 귀한 것, 꼭 지켜져야 할 것이란 의미에서만 머물 뿐이에요. 인권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역사와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말이니, 인권은 ‘발견’이 아니라 ‘발명’한 셈이죠. 동양에서는 대략 130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대략 120년 전부터 썼던 말입니다. 서양에서도 이 말을 쓴 것은 대략 250년~3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이란 말이 오랜 역사만큼 늘 자주 쓰였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근대시민혁명 과정에서 근대국가가 탄생할 때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인권이란 말이 자주 쓰였지만, 이후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썩 자주 쓰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백 년 전의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짧은 양차대전 중간시기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류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침략과 전쟁을 반복했어요. 20세기는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으로 눈부신 진보를 거듭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자기 파괴 행위로 점철된 전쟁과 학살의 시기이기도 했어요. 엄청난 규모의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인류는 마치 인권이란 말 자체를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결과는 참담했지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지금의 대한민국 인구만큼이 전쟁과정에서 희생되었어요. 비극은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만이 아니었어요. 소련에서만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였어요. 인류의 지혜,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가 모두 전쟁을 위해 동원되었어요. 여러 나라들이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상대방을 파괴하는데 썼어요.

루스벨트의 연설, 국가가 존재해야 할 까닭

자,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으면 사람이랄 수 없겠죠.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여러 나라들은 왜 이런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야 했어요. 그 중 하나의 답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유명한 네 가지 자유에 대한 연설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월 6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의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천명했지요. 미국이 왜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힌 거예요.

일본이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진주만 공습을 한 게 1941년 12월 7일의 일이니, 아직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도발에 전 세계가 신음하던 때였지요. 루스벨트는 독일 등과 싸우던 여러 나라에 항공기와 선박, 탱크와 대포, 총과 탄약 등을 보내기 위해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연설을 했어요. 루스벨트의 연설은 보다 적극적인 전쟁 지원으로 이어졌고, 이는 미국이 전쟁의 한복판에 빠져 드는 걸 의미하기도 했어요. 루스벨트의 연설은 미국이 단지 연합국의 병기고 역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루스벨트는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은 또한 군비로써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서, “싸울만한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했어요. 싸움을 해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는 “청년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회 균등,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 소수를 위한 특권의 종식, 모든 사람의 시민적 자유 보장, 보다 넓고 부단히 상승하는 생활수준의 보장, 과학적 진보의 성과 향유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전쟁을 앞둔 심각한 위기 상황. 73년 전의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목표를 이렇게 제시한 거죠.

뿐만 아니라, 루스벨트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에게 노후 연금과 실업 보험을 적용”해야 하고, “정당한 의료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더 넓혀야”하며, “효과적 고용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어요. 참전을 앞둔 상황,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루스벨트는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려는 미래는 네 가지 본질적이고 인간적인 자유에 기초를 둔 세계”가 될 것이라며, 네 가지 자유를 미국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어요.

곧,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 국민을 위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세계적으로 군축이 철저히 추진되고, 어떤 침략행위도 없는 상태를 의미했어요.

루스벨트는 이러한 가치가 천 년 뒤에나 실현될 수 있는 환상이 아니라, 당시 시대와 당시 세대에서 실현될 수 있는 세계의 현실적인 기초라고 강조했어요. 당시 미국의 운명이 수많은 자애로운 사람들의 손과 머리와 가슴에 맡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루스벨트의 연설 이후 73년이 지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도 70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 연설은 지금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설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또 국가지도자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맡기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국가지도자가 70여 년 전 루스벨트만큼의 식견과 안목, 그리고 전망을 갖고 있었는지 물을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폐허로 변해버렸어요. 학살과 파괴로 점철된 세계를 보면서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류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

고 여겼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여러 국가들의 본질적 의무를 되새길 필요로 절감했습니다. 성찰을 거듭하며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이었죠. 실제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이 원칙에는 단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져 있었고, 여전히 식민지를 갖고 있던 제국주의 국가들도 있었으며, 인종에 따른 차별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이 극심한 나라들마저도 이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들이 모여 인권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밝힌 거지요. 국가는 인권에 대해 부담과 의무를 지고 있기에, 인권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인권선언은 하나의 원칙일 수는 있어도,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을 온전히 드러내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어요. 만족할만한 완벽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가들이 모여서 단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만든 원칙이라는 점, 인권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에 서는 법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었죠.

애써 중요한 원칙을 만들었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세상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적도 많았어요. 전쟁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위로하는 조화(弔花) 정도의 의미에만 머물렀다는 악평을 듣기도 했죠. 곧바로 세계는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로 접어들었으니까요. 우리가 밭 딛고 사는 한반도에서는 3년 동안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이 참전한 대규모 세계전쟁이 벌어졌어요.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지 불과 1년 반만의 일이었어요. 반성은 제한적이었고, 전쟁의 참화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인류는 또 다시 세계대전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사태에 빠져 버렸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다음 거의 20년 동안 인류는 제자리걸음만 했어요. 냉전(冷戰)은 곳곳에서 열전(熱戰)으로 이어졌고, 대립과 분열은 더 심각해졌어요. 인권은 기껏해야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어요. 1966년 유엔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인권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세계 각국은 여전히 제국주의적 질서와 초강대국이 지배하는 패권적 질서, 그리고 냉전 구조 속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인권을 위한 새로운 바람

인권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는 1968년이었어요. 프랑스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1968년 5월부터 새로운 혁명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이 투쟁은 68혁명으로 이어졌어요. 프랑스의 투쟁은 독일 등 서유럽 여러 나라는 물론, 동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중국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저항운동이 진행되었어요.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반대운동과 흑인 민권운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저항운동이 전개되었어요. 냉전구조와 매카시즘 같은 색깔론의 공세로 숨죽여 지내는 것 같아 보였던 민중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서 과감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에 인권은 주로 조용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인권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했고, 인권운동가들의 활약도 부쩍 늘어났어요. 활약한 만큼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세계 곳곳의 인권운동은 위축되지 않고 활발한 투쟁을 벌였어요. 드디어 국가도 더 이상 인권을 모른척하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1970년대 후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인권이란 말을 자주 쓰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물론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인권친화적인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제국주의적 횡포를 부렸지만, 그래도 미국 대통령의 말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였어요. 이는 시민들이 갖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곧바로 인권문제라고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아르헨티나에서 군부세력이 국민과 민주화세력을 대상으로 ‘더러운 전쟁’ 등의 극단적 인권침해를 자행하면, 예전에는 그저 ‘국제문제’ 또는 다른 나라의 ‘정치문제’였을 뿐이지만, 이제는 ‘인권문제’로 여기게 된 거죠. 이렇게 시민 일반의 인식이 바뀌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던 것도 물론이지요.

그렇다고 인권이 늘 진전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2003년 미국의 두 번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처럼, 인권이 전쟁의 명분으로 둔갑하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또한 여전히 세계 각국의 시민들은 같은 인권이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뜻하는 바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부자 나라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해 늘씬한 몸매를 갖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백 세까지 사는 것을 인권이라고 여기는 반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마실 물과 기초적인 식량을 얻는 것이 인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여전히 마실 수 있는 물을 얻기 위해 하루 일상을 모두 허비해야 하고, 끼니를 잇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시대 상황에 따라 인권이란 말이 자주 쓰이는 시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경쟁력, 규제완화, 효율, 편리, 시장이나 성장 따위의 말이 더 자주 쓰일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상대적으로 인권이란 말이 더 자주 쓰였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선 경쟁력, 규제완화 같은 말이 더 자주 쓰이고 있어요.

그래도 긴 세월을 통해, 더 넓은 안목으로 보면, 인권은 분명히 진전되어 왔어요. 헌법 위에 군림하며 마치 창조주가 흑백을 분리한 것처럼 여기던 미국 백인들의 폭력적 흑백 분리 정책은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 로자 파크스 같은 흑인 운동가들에 의해 균열을 보이더니, 이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아프리카 선주민들을 국민은커녕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도 넬슨 만델라의 대통령 당선으로 과거의 일이 되었지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처럼 군인들만 대통령이 되던 한국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형식적인 측면에서나마 민주주의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인권이 무력해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인권은 비록 더딜지라도 세계 곳곳에서 분명하게 증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의 것

자, 그럼 이번에는 인권의 몇 가지 원리를 공부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인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이를 ‘보편성의 원리’ 또는 ‘평등의 원리’라고 불러요. 인권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참정권을 갖게 됩니다. 참정권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을 권리이니 참 요긴한 권리죠.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가 자신의 이익에 맞는지, 올바른 일꾼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식견이 있어야만, 엉터리 선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식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참정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갖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없고, 장애 여부가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종교가 뭔지,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지지 않죠. 물론 성(性)을 묻지도 않아요. 이런 게 바로 모든 사람의 권리,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 보편성의 원리는 일종의 잣대 역할도 합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데, 만약 그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건 인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권리를 갖고 있다면, 그건 특권이겠죠. 인권과 특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은 반인권이며, 또한 차별이 됩니다.

약자·소수자 원리로 보완해야

보편성은 중요한 원리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대접만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곤란해요. 상황에 따라 약자와 강자, 소수자와 다수자로 나뉘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처럼, 약자나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대접을 해야 할 경우가 있죠. 이처럼 각자에게 맞는 대접이 따로 있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럴 때의 다른 대접은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최소한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겠지요. 이를 ‘약자·소수자의 원리’라고 해요. 보편성의 원리는 이렇게 ‘약자·소수자의 원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개념입니다.

나눌 수 없는 권리, 인권

인권은 나눌 수 없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대 구분에 따라 1세대 권리, 2세대 권리, 3세대 권리 하는 식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런 구분은 그야말로 단지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이에요.

남영동 대공분실은 악명 높은 고문시설입니다.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이 이곳에 끌려와 고문을 받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지요. 이곳에 가면 박종철 열사가 고문 받았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고, 6월 항쟁은 박종철 열사의 희생이 계기가 되었으니, 이 방은 헌법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죠. 이 방에는 화장실 변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글썽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처럼 독립된 공간,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그냥 조사실 한쪽에 변기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마르셀 뒤샹의 샘이란 작품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변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고, 바로 앞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런 곳에서는 볼일을 볼 수 없겠죠.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똥오줌 가리는 것을 배우며 사람으로 컸잖아요. 그런데 다 자라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공개된 변기에서 볼일을 보라니…….

그럴 수 없죠. 당연히 볼일이 있어도 참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결국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역시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끝내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곧바로 비참해집니다. 다 큰 어른이 남들 앞에서 볼일을 보는 거잖아요. 남영동 대공분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그 때문에 비참한, 그리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만들

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조사하면서도 자기들 맘대로 모욕을 주고 고문을 해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조금이라도 덜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은 누구나 볼일을 봐야하죠. 아니면 큰일이 납니다. 하지만 볼일을 보더라도 인간답게 봐야 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단지 몇 Kcal의 영양이 몸속으로 공급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맛있는 밥을 먹고 싶고, 가능하다면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인권의 다른 여러 권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여러 인권 중에서 일부만 보장되고, 나머지 일부는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건 곧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종류의 인권이 다함께 보장되어야만 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권리들도 함께 보장되어야합니다.

나눌 수 없는 원리는 인권을 단계론적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반대합니다. 일단 밥은 먹어야 한다. 생존이 중요하다는 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기에 밥 먹는 것도 사람답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숙인을 위한 길거리 무료 급식은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뜻에서 진행되겠지만, 막상 음식을 받아들고 길거리에서 몸을 돌리고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노숙인들을 보면, 노숙인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게 거꾸로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도 변한다

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권의 내용과 목록은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 마을 떠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시대라면, 우리 헌법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라고 부르는 ‘여행의 자유’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 일을 위해서든 교육이나 문화를 위해서든 자주 이동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여행의 자유’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인권이 됩니다.

장애인 이동권만 하더라도 불과 2~30년 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장애인 당사자마저도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권리였어요.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장애 당사자들이 엄청난 희생을 겪었고, 또 끈질기게 투쟁하면서, 이제는 매우 중요한 권리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주차장을 만들어도 가장 주차하기

좋은 곳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마련해두고, 건물에도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 보도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필요해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높지 못해서 보지 못했던 문제를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권문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또 어떤 인권문제가 불거질지, 또는 우리가 익히 아는 평범한 사회현상을 인권으로 되새길지 모르는 일이에요. 분명한 건, 인권의 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의 내용과 목록은 계속 바뀌는데, 그 방향은 확장이라는 거죠.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갖는 소중한 권리지만, 그렇다고, 뭐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남을 해칠 권리, 남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 같은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권에도 제한과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인권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제한할 때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반드시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의 2는 이 원칙에 대해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인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인권을 제한할 수는 없고, 만약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그만큼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사규나 회칙, 학칙으로도 인권을 제한할 수 없고, 대통령령이나 부령, 훈령, 예규, 조례, 규칙 같은 법령으로도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필요와 법률이 있더라도 그래서 인권을 제한하는 게 합법적이라도 해도,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 곧 인권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나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일상은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같은 것을 중

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법률이 있어도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 법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는 아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 없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하위 법률을 통해 제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권은 노력한 만큼 열매 맺는 것

앞서 ‘천부인권(天賦人權)’이란 말 때문에 생긴 오해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이 표현은 다만 인권이 하늘이 준 선물처럼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인권은 하늘의 선물일수도 있지만, 그 인권을 누리는 것은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참정권이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누구나 누리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도 예전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민주정치의 서막을 연 나라였습니다. 왕이나 황제처럼 혈통에 의해 국가지도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국가지도자를 뽑는 민주적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정이 아닌, 공화정의 탄생입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대혁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제1공화국에서 참정권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전부 남성이었고, 일부 부유한 부르주아 계급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일반 시민 중에 참정권을 지닌 사람은 0.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자신의 대표를 투표로 뽑는 공화정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제1제정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는 옛 왕정이 다시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리곤, 1848년 2월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프랑스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제2공화국도 보나파르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제2제정으로 붕괴되었으니, 프로이센-프랑스 전쟁(보불전쟁)으로 제2제정이 무너지고 제3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거의 100년 동안 혁명과 반동의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정치적 격변과 함께 참정권도 조금씩 진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정권의 확대도 철저하게 남성들만의 일이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참정권을 보장받는 것은 1946년이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참정권 역사는 157년의 긴 세월을 통해 모든 사람의 권리에 이르게 됩니다. 157년의 긴 세월 동안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의 끈질긴 그리고 치열한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권리가 주어지는 적은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의 계속된 요구, 그리고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894년 갑오농민전쟁 때 펼쳐 일어났던 민중의 투쟁을 시작으로, 1919년의 3.1혁명, 1948년의 4.3항쟁, 1960년의 4월 혁명, 1980년의 5월 혁명, 1987년의 6월 항쟁 등 숱한 항쟁과 그에 따른 희생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인권도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기에 조금씩이라도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인권에 대한 공부, 곧 사람에 대한 공부

인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인류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가장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으뜸이라는 뜻에서 이런 가치관을 인본주의(人本主義)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資本主義)지요. 사람이 중심에 있는 것과 돈이 중심에 있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비록 자본주의 체제라 하더라도 인간중심의 자본주의, 또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여야 합니다.

인권에 대한 공부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권에 대한 공부도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작업처럼, 매우 넓고도 깊은 무언가를 찾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끝없이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과정이고, 상식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축될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만 가려낸다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었지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이로운 일인지, 무엇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생각한다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인권의 생활화 — 선진화의 길¹⁾

박경서/ 前 대한민국 인권대사

1) 시작하는 말

5,500만의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지구, 특히 유럽은 그 전쟁의 황폐가 전승국이나 패전국에 아무 차이가 없이 지구상 그 어느 지역보다 더 처참하였으며 이는 전승국이나 패전국의 구별 없이 똑같이 잔혹했습니다. 이 폐허위에서 이제는 지구상에 이런 전쟁은 영원히 없어야 되겠다고 모두가 다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명감 위에서 **평화/안전, 개발, 인권의** 3가지 임무를 천명하면서 유엔은 1945년 6월 15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 2차 유엔총회에서 그 유명한 세계 인권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년으로 유엔은 그의 창설 69년째를 맞고 있으며 40,000명의 일꾼을 거느린 유엔 수장에 한국의 반기문 총장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인구 5,0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남한은 그래도 우리 내부에 문제는 많지만 세계가 우러러 보는 경제 대국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가면서 2013년 1월부터 2년간 안전보장 이 사회의 이사국 15개 국 중의 한 하나로 그의 업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3년간 유엔 인권 이사국으로 재 선출되었으니 향후 2년여를 인권의 지도국으로써의 임무를 통해 세계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193 개 유엔회원국에게 한국의 인권 선진국으로써 프로그램과 계획을 발표해야하는 위치에 있다는 우리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모두를 뿌듯하게도 하지만 그에 따른 책무의 성실한 수행에 무거운 부담감을 갖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그래도 성공적인 한강의 기적은 서구의 발전 모델에 비교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낸 한국형 압축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압축 성장은 우리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선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OECD 34개국 중 출산율은 최하위이요, 자살률은 최상위인 우리의 어두운 얼굴, 며칠 전 빛에 쫓들린 40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질러 무려 29대의 자동차가 전소된 기록, 몇 년 전 보상액에 불만을 품은 당시 60대가 국보 제1호 남대문을 방화한 사건,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회 병리적 사건들은 그사이 일등이면 최고이다 2등부터는 아무 쓸모없다, 돈을 많

1) 이 글은 필자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 지식사의 2012년 저서의 일부분을 선택 가감 보완 압축 하였음.

이 별면 다 된다 하는 금전 만능주의가 저질러 놓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사회의 곳곳에 드리워진 심각한 양극화의 현실은 사회의 주된 흐름에 낙오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라고 감사하면서 소수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면서 이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품어 안는 정책이 전무하여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무시당하고 버려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기한 몰상식한 우리정책의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병든 사회를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치유하고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사회전체가 멎고 서로가 단절되어 치유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유엔은 인간의 행복과 평화의 출발을 **인간 안보**라는 용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며 그리고 무식에서의 해방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인간 안보의 출발이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 개인의 안보가 가정 사회 국가 지역 세계로 확장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인권을 **자유권, 사회권,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이라는 5가지로 선포 하면서 이 5가지의 인권이 아주 보기 좋고 매끄럽게 포괄적으로 연계하면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유권은 우리의 책임을 동반한 자유요, 사회권은 행복 추구권이요, 평화권은 전쟁과 핵의 위협에서의 해방이요 우리의 인간 안보의 달성이요, 발전권은 우리의 균등한 삶이요, 환경권은 우리를 둘러싼 조물주의 창조질서의 보존을 뜻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21세기 인권은 서로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서로 연계되어 포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종종 어려운 학자들의 학문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는 잘못 인식되어있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쉽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이 쉽게 접근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한다는 말입니다. 즉 인권의 생활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가슴에서 우리나라오는 사랑으로 상대를 보듬어 안으며 평화적으로 건설적으로 투명하게 아주 비정치적으로 접근되어야 발전한다고 유엔은 권고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모든 기구가 인권 발전의 방법론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쓰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이 방법론의 실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근 20년의 외국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지 14년째 입니다. 지나간 13년 동안 유럽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라든지, 말소리의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럽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점은, 유럽의 경우 이미 오랜 전통을 통해 인권이 자리 잡은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권이

자기의 생활화 되고 내면화(internalized)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스스로의 인권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영유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삶 그 자체 속에 인권이 이미 스며들어있기 때문에 인권을 특별히 생각하거나 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상당히 고고한 학문에 속하는 덕목이며, 인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나의 일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따로 생활 따로 놀기에 하루속히 인권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입니다. 서구식의 문화가 좋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500년 이상의 유교문화에서 우리에게 스며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전통이 서구식 문화의 개인주의 중심과 충돌했을 때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선 우리의 공동체중심 문화에 서구식 인권 중심의 생각들이 용해되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제3의 우리식 인권 문화가 창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으며 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140만 이상의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우리만의 제3의 인권선진국 도약의 모델을 창조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서구의 용해된 인권 문화에 우리 한국식의 공동체 중심의 전통 문화가 접합되어 제3의 우리의 인권선진국으로의 문화가 무엇인가 고민해 보기 위함입니다.

2)한국 인권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가?

20세기의 발전모델은 경제성장 위주였습니다. 이를 UN도 목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전모델은 경제 성장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을 임무로 하는 UNDP 같은 기구에서도 경제 성장이 있는 한 약간의 인권 유린이나 환경 파괴는 목인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경제수치증가 일변도에 치우친 이 발전모델은 1997년 12월에 이르자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신흥국가들이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재정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여기에서 얻은 교훈을 살려 '21세기의 발전 모델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다'라고 천명하게 됩니다. 소위 UN에서 얘기하는 성장속도는 느리지만 평화, 인권, 환경보존, 정의가 핵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21세기의 발전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21세기 발전 모델을 가지고 전 세계는 현재 인권, 평화, 환경보존, 생명, 정의라는 덕목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고, 인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우리는 인권을 더 발전시켜야하는 책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과리에 위치하고 있는 OECD는 전 세계 200여개의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거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나라들, 즉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부유한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OECD의 세 가지 가이드라인도 이런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OECD는 1946년 조지 마셜장군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피폐된 유럽 경제를 캐나다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부흥시키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원래는 OEED(Organization of European Economic Development), 즉 유럽 경제발전을 위한 기구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써, 더 발전된 세계적인 기구, 즉 OECD(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되었고 이 OECD를 주축으로 해서 전 세계의 경제와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기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OECD에는 현재 34개국의 나라가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OECD는 그 34개 회원 국가만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저개발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시함으로써 더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소개하여 그들도 언젠가는 회원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ECD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체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참 경제발전의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회원국들을 평가하며, 개발도상국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중시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발의 문제를 이끌어가는 지침이기도한 이 가이드라인은 그 첫째가 경제는 건전하며 강해야 한다고 해서 'Stronger'입니다. 둘째는 사회는 깨끗하고 투명해야한다고 해서 'Cleaner', 셋째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들이 균등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해서 'Fairer'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으로 1996년 뒤늦게 회원국이 된 한국을 평가할 때, 첫째로 강한 한국 경제는 더욱 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늘 경제에서는 제법 점수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 인구가 5,000만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가 세계의 11-13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무역 고를 따지면 세계 8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Stronger'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한국은 상당히 칭찬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Cleaner'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한국은 늘 30위 언저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인권유린 등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셋째의 'Fairer'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서도 역시나 우리나라는 30위 전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기회를 균형 있게 공유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소외된 집단이라든지 불만을 표시하는 집단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우

리는 아직 OECD내에서 경제 외의 인권, 개발과 같은 항목에서의 순위가 늘 뒤쳐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라는 세계 인권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자유권 중에서 시민적 자유권과 정치적 자유권 즉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매년 세계에 있는 약 120개의 나라들을 ‘자유’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프리덤 하우스가 매기는 점수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인권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하는 데에 자유권에 관한 한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15년 동안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리덤 하우스의 점수 매기는 방법은 시민적 자유를 1-7점으로 매기고 정치적 자유문제를 1-7점까지 매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평균이 1-2점이 되는 나라를 자유국가(free state)라고 얘기하고 3-4까지를 반 자유국가(half free state), 그리고 5-7점까지를 자유가 없는 나라(not free state)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버마라든지 북한 등의 나라는 7점을 받아서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 됩니다.

우리나라는 17년 전부터 평균 2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평균 2점을 받기 때문에 자유국가로 분류되어서 세계에서 한국은 인권이 잘 작동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덤 하우스의 연차보고서를 보면 우리보다도 평균점수가 높은, 즉 1점이나 1.5를 받는 나라들이 56곳이나 됩니다. 이 56곳에 뒤이어 우리나라는 57번째 입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내세우는 자유권에 관한 한 한국은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57위라는 것이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입니다. 이 현주소를 우리 머릿속에 두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인권을 공부해야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인권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왔다(already)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not yet)는 용어으로써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3)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이 자기 권리 주장을 집단으로 표현하여 관철한 것의 시작을 고대의 그리스나 로마의 시대의 예를 건너뛰고 나면 1215년 영국의 존 왕 때의 대헌장(Magna Carta Liberatum)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인간들은 인권 즉 자연이나 동물이 갖고 있지 않는 존엄성을 논할 필요가 없는 사회에서 아무 지장 없이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면 인권이 따로 논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았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도시 사람들 즉 문명인이 사는 도시 속에서 숨 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문명과 함께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인간관계가 다양해진 사람들에게 인권은 더욱 절실하고, 그렇기에

우리들 주위에 더욱 가까이 다가왔음을 짐작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생활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인간관계가 서로 엉키고 복잡다단해 지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권은 우리에게 다가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국민소득 25,000불 이상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권은 더 절박한 덕목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서유럽의 역사처럼 긴 시간, 즉 근 100년간의 계몽주의 시대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 지성인들이 몽매한 백성들을 교육하고 설득하며 공동체의 인권을 가르친 시대가 결핍된 채로 압축개발의 덕분에 3만 불에 가까운 시대를 맞이하였고, 그러기에 다른 면에서는 인권이 아직 생활화 되지 않은 채 ‘인권 따로 생활 따로’가 우리의 실정이나 더욱 절박하게 인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혀 있는 도시의 삶 속에서 인권을 잘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매끄럽게 실천한다면, 비록 어렵겠지만 우리의 행복이 배가 될 수 있으며 한층 돋보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고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원시부족사회처럼 법이나 규제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권이 삶에 녹아 용해되어 버리면 인권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생활화, 내면화가 된다면 인권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인권의 생활화 및 내면화란 무의식적으로도 인권이 몸에 배어서 실천하게 되는 경지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지가 인권 선진국과 국민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환경에서 살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서 인권 생활화의 또 하나의 예로서 음주단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독일에서 60년대에 같이 공부한 사토시 히라타 목사가 있습니다. 1968년부터서 나의 5살 위의 손위의 일본 친구였으니 50년 이상을 한결같이 우리는 같이했습니다. 지금도 교토에 살고 있는 부부는 우리 집의 친형 같은 분입니다. 언젠가 오사카에서 저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 갔더니 경찰이 음주운전 테스트를 하는데, 술을 먹었으면 의례히 운전을 안 해야 하는데 왜 단속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1967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공부할 때 내 클래스메이트인 휴버트 마티아스에게서 들었습니다.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독일의 보험 회사는 음주자의 원칙 부담을 하기에 독일은 음주운전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오사카에서 떠올랐습니다. 정말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경찰이 길에서 음주 테스트를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보였습니다. 선진국은 거의 모두가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단속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타인의 인권을 침범할 수 있다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인권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열매 맺은 공동체 인권이 생활화된 선진국의 인권문화가 우리에게도 생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인천 아시아 게임이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현정화씨 왕년의 탁구의 여왕이 음주 운전으로 택시기사와 행인을 부상시킨 예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인권에 관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염원과 달리 현실은 꼭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상호 신뢰의 바탕 속에서 서로 대화를 통한 합의가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후진국적인 일들이 우리의 소원에 반하여 벌어지는 것 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주위에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초점을 흐리게 하는 몇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의 시각들을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들처럼 인권이라는 가치가 내면화되어 생활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수정하거나 없애야만 참 인권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릇된 시각을 바로잡아 우리가 바라는 인권이 우리의 행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인권 실천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시각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인권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 해봅시다.

첫 번째 잘못된 시각은 인권은 경제 발전에 저해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아마도 60-70년대에 우리가 걸어온 역사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까지 자원이 없는 우리가 수출을 통해 발전을 꾀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기본권을 제약 받던 끝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노동운동을 통해 인권을 부르짖었을 때 정부나 몇몇 악덕 기업주들이 근로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부르짖는 것은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단견으로 우리 근로자들을 탄압한 데서 기인합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나라들이 인권신장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인권은 경제발전에 저해된다는 생각이 허구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UN은 '발전 없는 평화와 안보는 물론 평화와 안보가 없는 발전 역시 무의미하며, 인권존중이 없는 평화/안보 그리고 발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전세계에 선포하고 있음²⁾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권·평화·발전의 세 기둥은 아주

2) "We will not enjoy development without security, we will not enjoy security without development, and we not joy either without respect for Human Rights. Unless all these causes are advanced, none will succeed." 유엔의 말을 원문으로 적었습니다.

가깝게 한 가족처럼 같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권은 경제발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는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서구의 선진국들의 근대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인권과 경제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인권의 중요한 새 분야인 평화권이 직접 정착되어야 하는 한반도는 아직 아슬아슬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지난번의 연평도 북한 도발사건과 같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직후의 증권시장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행히도 곧 수습되었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상황과 주식시장은 그렇게 같이 연계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과 인권신장은 늘 함께하는 동전의 양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자유 없이, 또는 인간의 자유권을 탄압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제 발전은 한계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를 극대화시켜서 성공한 모델처럼 보이지만 성장이 일정 수준 달성되면 근로자들이 탄압받고 인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모델이 한계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70년대의 상황처럼 오늘날까지 근로자의 자유권을 제약하여 쟁의권, 단체 협약 권을 탄압했다면 우리의 경제는 오늘처럼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의 성장모델을 중국이나 싱가포르의 모델보다 훨씬 우위에 두고 평가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권은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폭력화한 교섭권은 국민의 성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의 잘못된 시각은 인권은 우리 생활과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인권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은 사실 인권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이미 스며있을 필요가 없는 덕목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나 인권교육이 아직 덜 체계화 되어 학교 교과과정에 잘 접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인권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고 있으면 되고 우리의 행동을 동반하는 일상생활과는 무관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인권만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가치도 없을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마 인권 없이는 어떠한 일상생활도 무의미함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며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겪었던 한국 전쟁이 오늘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권이 위태롭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치안이 불안하다면 우리는 인권이 불안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인권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하나는 이미 우리 주위의 생활이 이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예의도 인권의 표현이고,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수행도

인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또한 친구 간의 깊은 우정도 서로의 인권 존중이 동반될 때 값지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를 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서유럽의 모든 나라 또는 미국 캐나다를 여행해보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몸에 배어 있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회상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1967년 새벽 4시의 함부르크의 번화가에서였습니다. 운전자 누구나 붉은 신호등에서는 멈춥니다. 그 시간 좌우를 살펴보면 아무 곳에서도 자동차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운전자는 알지만 몇 분을 조용히 기다려 푸른 신호등이 켜지면 다시 운전합니다. 이것은 스위스 제네바의 새벽 세시에도 마찬가지이고, 뉴욕의 거리에서, 런던의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생활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새벽 서울의 거리를 봅시다. 새벽에 거리를 지나 보면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거의 모든 차들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 택시의 경우 심지어 대낮에도 거의 80%는 교통법규를 무시합니다. 대중교통의 왕자인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대낮의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니 슬픈 현상입니다. 어찌 보면 교통법규가 우리 몸에 완전히 내면화 되는 날에 우리의 인권도 약 두 걸음 발전 할 것입니다. 인권은 우리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녹아내려 거리낌 없이 실천 되었을 때 우리는 인권 선진국의 시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시각은 **인권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폐법'이 정규 법률보다 우선 한다고 공공연히 자학하는 경우가 있음을 목격하면서 큰일 났구나 하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은 맞물려있는 두개의 톱니바퀴라고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이 서로 부딪혔을 때는 공동체의 인권이 우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법'은 하루속히 없어져야합니다.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공동체의 선이나 이익에 내 주장이 부합되는지 대치되는지 먼저 살펴야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 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 했지만 선진국 사람들처럼 조용히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줄을 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몸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생활화 그리고 내면화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한국 사람들은 인권 선진국의 시민 수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경찰청의 보고에 의하면 폭력을 동반한 시위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 시위는 어떤 경우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작용하면서

결국은 시위자 자신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평화적 시위가 훨씬 효과가 있음을 깨달아 인권주장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인권은 속력은 느리지만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오는 덕목이라는 생각입니다.** 인권은 인간이 꾸준히 노력한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이 좋게 추진할 때에만 인권이 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핑계 삼아 상대방을 구석에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UN에서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심으로(Truly), 건설적으로(Constructively), 평화적으로(Peacefully), 투명하게(Transparently), 그리고 비정치적으로(Non-politically)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기구들이 당사국을 재제하기 전에 기술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먼저 실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한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일생동안 자신을 평가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늘 당사자와 함께하고 있을 때 가치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합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는 일생동안 자신들보다 못하는 나라들을 감싸 안아야 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라크 전쟁이 한참일 때 이라크 군인들을 수감했던 미국의 판타나모 수용소의 끔찍한 인권유린, 고문의 사례는 자유권을 증시하고 고문방지 협약을 맺은 미국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곳을 방문하여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절대로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는 많은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개월전의 군대내의 인권 유린은 온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친 국가안보주의, 금전만능주의, 군사제일주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등의 의식과 공권력의 폭력이 한데 어우러진 경우들이기에 분야별로 분리하여 해결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이러한 인권 침해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인권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십시오.

인권의 신장은 제 3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에 의해서 또는 당사국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제 3자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제 3자는 항상 당사자인 개인이나 국가가 즉 이들 당사자(국)가 아주 즐겁게(Willingly)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만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정치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70년, 80년대에는 인권 분야에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를 폄하하고 억박지르면서 비위를 거스르게 했을 때 우리는 매우 불쾌했지만, 우리를 이해하면서 평화스럽게 타일렀을 때는 진지하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권의 신장은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우리는 완전무결하다고 외칠 수 없는 긴 세월에 걸친 과정(過程)의 역사입니다. 서양학자들은 서구의 인권이 정착되고 생활화, 내면화된 것은 1688년의 명예혁명에서 1789년의 프랑스혁명까지 100년 동안의 긴 계몽주의 시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합니다. 교회의 절대 신(神)과 왕권(王權)의 절대 권력에 대항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대항한 많은 지성의 철학자들이 왕권과 신권에 맹종하고 복종하는 무지하고 불쌍한 일반 국민들을 계몽하면서,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기에 짐승과는 다르고, 교회의 교리나 왕의 명령이 합리적인 분석에 따른 것이 아니면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모든 이론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하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쳤으며, 인간은 비판 할 수 있는 용기(Mut Zur Kritik: Immanuel Kant)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대중이 깨우치게 된 100년의 긴 계몽의 세월을 값진 100년이라고 말합니다. “지구는 둥글고 자전을 하면서 태양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든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이태리의 코페르니쿠스를 시작으로 제네바의 장자크 루소, 영국의 존 로크, 그리고 몽테스키외,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 이태리의 디드로, 프랑스의 볼테르 등등의 기라성 같은 계몽주의 학자들이 몽매한 백성들을 교육, 설득, 계몽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인권은 예언자적인 미래 창조, 즉 새 역사 창조 운동입니다. 그러기에 인권 지킴이의 행동은 많은 경우 환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개혁적이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권의 신장은 선진화의 첩경 이므로 꾸준하게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4) 인권을 에워싼 몇 가지 쟁점

국제 사회에서의 인권에 대한 해석은 국가의 권위와 체면에 많이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인권에 대해 각자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상대 국가를 공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권은 어느 누구를 또는 어느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인권창달을 위함이라면 아주 완전히 비정치적이고, 친화적이고, 대화를 통해서, 건설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가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UN에서마저도 인

권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현실에 비판하여 포기하지 말고 인권의 발전은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욱 빨리 발전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각 회원국가의 상이한 해석과 충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UN으로 하여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UN 인권이사회는(당시는 인권위원회)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UN 세계 인권 특별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세계회의에서 UN은 사회권과 자유권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상호연관성(Inter relatedness)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권과 사회권은 불가분의 관계요(Inseparable), 상호의존적이며(Interdependent), 그리고 상호보완적(Mutually Supported)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두 개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와 발전의 상황 때문에 미국은 아직도 인권이라고 하면 자유권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은 UN까지 포함해서 사회권도 자유권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UN의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은 현재 점진적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이나 현실은 아직도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갈 길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내가 속하는 공동체 전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남을 속인다, 휘발유에 물을 타서 판다, 부패한 식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약품을 섞어 생선의 부피를 늘린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들이 정말 과감하게 버려야합니다. 가난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등 개개인의 입장이야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일들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제는 절대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 생활 속의 인권 - 우리 생활 속에서 내면화 되어야

또 스위스에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손님을 태우고 공항에 데려다 줘야 할 일이 생겼는데, 당시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바쁜 나머지 제가 속력을 냈습니다. 그 때에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제 자동차가 찍혔었나 봅니다. 그 고지서에 보니까 제가 제한 속도보다 5km/h를 더 빠르게 달렸었는데 200프랑의 벌금을 냈습니다. 200프랑은 지금 환

산해보면 약 26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과한 벌금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절대 속력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속력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의 생명권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권에 직접 영향을 주기에 우리는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는 너무너무 큼니다. 공공장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마치 더 훌륭한 것처럼 착각하고 지내는데, 우리는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의 행복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조용조용 이야기 하고, 가족들이 식당에 생일파티를 왔으면 떠들지 않고, 옆 사람들 그리고 이웃에게 웃음을 주는 성숙한 문화가 하루속히 정착 되어야겠습니다. 자기의 큰 목소리 그리고 방중에 가까운 양육방식은 스스로에게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내 이웃 그리고 공동체의 인권과 행복을 방해하고 침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의 몸에 배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용하고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전철 속에서부터 선진국 수준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한류 문화에 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리, 베를린, 런던에서까지 우리의 젊은 가수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전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우리들의 얼굴을 보면, 모처럼 한국의 이미지를 곱게 소개하고 있는 한류 문화와는 정 반대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세계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이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인권이 용해되어있다, 생활화된다, 내면화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인권이 우리에게 내면화되었을 때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인권의 내면화를 통하여 선진화되어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저는 제네바에 근무하는 동안에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은 곳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힌두나 무슬림 축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축제는 미국식의 축제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이 먹고 즐기는 것이고, 또 그것이 행복의 척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나라들의 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핍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정말 감격과 행복에 차 빛나고 있었으며, 그들의 그 눈빛은 결코 돈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만은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춤을 추고, 내 친구를 만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제목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 하는 이 생각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야하겠습니다.

6)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권

여기에서는 가정과 학교라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인권이 몸에 배인 어린 아이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은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따로따로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과 학교가 인권을 위해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정과 학교의 인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정과 학교는 인권 고양을 위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가정과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인권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상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의미에서 학교보다도 가정의 영향이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학에서나 심리학에서나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등한 관계에서 모든 일을 서로 존경하면서 해결한다면 그러한 부모의 모습은 자식들이 자라서 결혼했을 때에 그들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따라 간다는 사실을 많은 사례에서 경험을 통해 증명이 되곤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만약 부모가 싸우면서 서로 폭력관계에 있다고 상정해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으로 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어린이는 훗날 학교에 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어린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의 남성들의 경우, 지금은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가정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가정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사이의 원만한 평등관계가 자식들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결혼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주례사에서 저는 '1/2 운동'을 하라는 당부를 신랑 신부에게 합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부부가 자기의 욕심이나, 아집이나, 고집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에서 1/2 더하기 1/2은 1이 되고, 1 더하기 1은 둘이 됩니다. 각자가 온전히 1이 되고자 한다면 부부의 일심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는 항상 자신의 절반을 줄이고 상대방도 절반을 줄였을 때에 일심동체, 즉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 경제 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음으로써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소위 금전 만능주의,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부작용을 지금 미국, 유럽, 또 신흥경제대국들이 특특히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집안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러한 사상들이 풍미되어서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가치인 인권이라든지, 공동체의 선, 혹은 국가의 번영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금전만능주의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인권이나 평화나,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것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스위스의 경우를 보십시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갈 때에(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터)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아이에게 “대학교에 갈 것이냐, 직업학교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담임선생님이 부모님과 연락 상의하면서 중학교 졸업 전인 약 1년 후에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에 대학교를 가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전문학교를 가는 사람은 돈을 적게 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위스처럼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약 80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도 65세가 법정 정년퇴직 연령입니다. 여성의 경우 62세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남자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에 직업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대학을 가지 않기 때문에 직업학교를 졸업 하면서부터 바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직업학교를 나와서 65세에 은퇴할 때까지 버는 전체 총액과,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늦게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이 65세 은퇴할 때까지 버는 총액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의 경우에는 4-6년을 더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나중에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지만, 직업학교에 가는 사람과 대학교에 가는 사람이 일생동안 버는 돈은 대략 비슷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 후 연금의 액수도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책정 되었고 어느 경우는 직업학교 졸업자가 은퇴 후에 대학 졸업자보다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는 공부하기가 싫다, 나는 장인(匠人, Meister)으로 일생을 보내겠다, 나는 직업학교에 가서 요리를 배워서 일류 요리사가 되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멋있하고, 어떤 경우에 “나는 대학교에 가서 위대한 학자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대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직업학교의 비율이 스위스의 경우에는 대략 3:7 정도가 되어서 3이 대학교에, 7이 직업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제 아들들의 친구들을 보면, ‘나는 소외되었다’, ‘나는 직업학교를 나와서 내 친구들보다도 조금 모자라다’ 하는 생각들이 전혀 없는 사회 전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만능주의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겠습니다. 고급 실업자들만 양산하고 등록금은 폭등해서 많은 가정들이 파탄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혹은 독일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전문학교나 대학교 진학 여부를 학교와

부모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고 전문학교 가는 사람이나 대학을 가서 공부한 사람이나 65세에 은퇴할 때에는 자기가 받은 임금이 거의 동일하도록 장치를 함으로써 사회적 규제와 통제를 국가 차원에서 조정해 모든 젊은이들이 비용도 절감하며 사회적 낙오자도 구제하는 방향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유럽의 교육제도는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는 같이 가는 인권의 공동체이며, 각각의 일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같은 선에서 협력을 했을 때에 한국의 인권은 좋아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소지품 검사가 좋으냐, 나쁘냐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런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아도 학생 스스로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문화가 가정, 학교, 사회 전체 속에서 융해되어서 생활화 되었을 때 인권은 진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들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가르치면서 보니, 유럽의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네 나라가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학교에서의 체벌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어디든지 자기의 용모는 자율적으로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에 따라 머리 모양을 하도록 학생 스스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학교와 가정과의 밀접한 관계가 꼭 중요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선생님과 같이 상의하고 가장 좋은 방안을 공동 결정해서 학생에게 최선의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가정과 학교가 대화를 통해 설득해서 학생이 부담 없이 따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서구에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똑같이 학생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모의 인형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적성을 찾아 전문학교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경우, 부모에게나 당사자인 학생에게나 전혀 인권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어린이의 소질이나 적성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눈으로, 부모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맞추어서 아이를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할 때 오는 불행이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합니다. 학생과 부모 사이에, 또 부부사이에 교육에 대해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갈등이 생겨나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을 생각하는 부모는 아이의 소질을 고려하여 교육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를 호되게 나무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하고 정반대의 개념이다, 즉 나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나무라고 꾸짖어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아이에 대한 참 사랑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국의 젊은 엄마들이 전철에서 어린 아이들을 놔두어서 떠들고 돌아다니게 한다든지, 그리고 식당에서 어린이들이 자기 놀이터인양 떠들고 다닌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반복되는 한 학교의 공교육은 늘 가정과 유

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과 학교가 불일치되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학부모가 학교 선생님들을 나무라든지 공격하는 불쌍사나운 일이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정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교육을 변화시켜야합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보다, ‘너는 돈을 버는 것 이전에 너보다 못하는 친구나 이웃의 문제를 더 생각하는 성숙된 자세가 더 중요하고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인권 평화 봉사 환경보존 등등 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부모님들은 사랑에 넘치는 엄한 얼굴로 타 이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학교 가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가정과 학교의 조기영어 교육 만해도 그렇 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나이 어릴 때 일수록 빨리 영어를 가르쳐야한다고 야단입니다. 영어의 무엇을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고 원어민이 가르치는 영어면 최고라고 느낍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보야겠습니다. 영어만 잘하면 그냥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도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출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합의도 안 됐다는 점은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어가 꼭 필요한 사람만 영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지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가르치는 것은 필요 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스스로의 선택권을 영어교육에까지 확산시켜 야만 우리들이 선진교육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에서는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많은 문제점 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120년 전, 터키에서 이주노동자(Gastarbeiter)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주노동자들이 120년 동안 독일 속에서 대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히 독일 문화와 터키 문화를 합한 제 3의 문화를 만들어 선진국의 문화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문화 사회 속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합해져서 제 3의 성 숙된 문화로 탄생할 수 있도록, 국가와 NGO 등의 여러 단체들이 이러한 다문화 가정 2 세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성장하는 전 기간 에 걸쳐 인권 교육이, 즉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 리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창조해나가야 되겠습니다.

7) 사회에서의 인권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처이기주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속하

는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 전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문제도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세력이든지 그 권력이 너무 커져버려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집단이 없고, 검찰 내부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검찰이 자기 스스로를 감찰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상대방이 내 잘못을 조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민의 편에서 결정해서 두 집단이 서로 매끄럽게 협력하면서 상호 견제를 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OECD에서도 범죄 그리고 부패 방지를 위해 이런 시스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정부에서 결국은 완전무결하게 경찰도 수사권 독립을 갖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면서 매끄럽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역기능을 좀 봐야 합니다. 특히, 제 자신이 속해있는 개신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교회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헌금은 신자들, 즉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움직여지는 집단에는 신성불가침의 조약처럼 절대 권력이 보호받는 19세기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교회들이, 모든 종교공동체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어 더 가난한 이웃들에게 쓰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세습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려는 등의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했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전부 2/3 이상이 이 사형제도 폐지 문제를 찬성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정신분열증 환자라든지 사회 낙오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는 등 흉악범죄가 나타나 국민의 정서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그런 흉악범죄가 더 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받게 됨은 당연합니다. 저는 인권대사를 할 때마다 UN같은 국제회의에 가서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고 사형 선고를 하고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로써 국제사회는 한국이 사형제도 폐지로 가는 중간단계에 있다고 보고 사형제도 폐지 문제에 있어 현재 한국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국도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폐지 문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 사

형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흉악범의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니 오히려 흉악범의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선진국도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흉악범에 의해서 희생당한 나머지 가족들의 정신적인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사형 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보안법의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저희들이 근 20여 년 동안 즐기차게 UN 인권이사회에서 폐지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 평화 인권을 생각해서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소수 국민에게는 설득력을 갖고 있으나 대다수에게는 그렇지 않거나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는 사람이 많이 없으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많은 양심수들을 처단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자유를 구속하는 군부독재에 항거한 많은 학생, 지식인, 노동자와 농민들, 인권 지킴이들을 국가의 분단 상황에서 국가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약적 논리로 탄압했던 쓰디 쓴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민주 애호가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을 성원하였고, 그러한 우리의 성스러운 도전의 결과가 오늘의 한국 민주화를 이룬 것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잘 알고 있는 UN은 계속해서 그리고 진지하게 이 법의 폐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가보안법을 언젠가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히 서두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의 분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북한을 바로 눈앞에 둔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망설이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단이 해결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국가보안법은 그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합법적으로 자동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탈북자들의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대강 2만 7천 명 가량의 북에서 남으로 살려고 온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탈북자들의 행복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권대사로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용역을 주어 당시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조사에서 ‘나는 남쪽에 와서 참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한 사람은 4.9%였습니다. 참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45%가 ‘나는 남쪽에 괜히 왔다’고 응답했습

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이 난다, 둘째는 남쪽의 이 자유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기 힘들다, 셋째는 남쪽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 혐오하는 눈 때문에 여기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이 두드러진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나는 아직 남쪽에 온 것이 잘 했는지 못한 것인지 아직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도 지켜봐야 되겠다는 50% 중에서 절반만 잘 왔다고 생각하고 절반이 잘못 왔다고 생각하면, 1/3만이 행복하고 2/3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서 매끄럽게 동화되어서 그야말로 민주 자유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한 사람 한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남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노력을 해서 이 분들을 품에 안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교회의 부정적인 역할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많은 교회들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기관에서 탈북자의 적응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합니다. 종교기관이 인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역할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나 성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사람의 형상이 조물주의 형상과 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성을 갖는다는 것을 주일학교의 교과서에서부터 가르치고, 절에서 스님들이 동자승 때부터 남을 사랑하고 자기와 같이 생각하며 서로 나누는 이런 정신을 가르치는 것 등이 종교기관이 인권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인권 현안들이 우리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문제 다문화가정 결혼의 실패의 경우 여기에서 탄생한 다음 세대 문제, 동성애의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 등등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모두의 해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하여 여기에 최선의 해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 과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8) 끝맺는 말

우리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들어가는 말에서 이미 언급 했듯이 40,000 명의 일꾼을 거느리고 세계를 대표하는 유엔의 수장을 배출한 나라 5,000만 명의 적은 인원으로 경제력이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2005년부터 경제사회 이사회의 소 위원회였던 유엔 인권 위원회가 인권 이사회로 격상 되면서 부고등 판무관까지 배출한 우리나라는 세계 193개국 유엔 회원국들 앞에 특별한 의무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많은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

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인권 모범 답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인권교육법의 법제화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향후 2년간 안전보장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봉사할 것이며 앞으로 3년간 유엔 인권 이사회의 회원국으로 모범 답안을 만들어야하는 의무도 동시에 부여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이 권장한 인권 조약 기구 9개중 7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즉 인종차별 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고문 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 권리협약 이상의 7가지 조약 기구에 가입해 있고 나머지 2개인 즉 언젠가는 가입해야하는 이주 노동자협약과 강제 실종협약은 미 가입상태입니다. 이상의 가입한 7가지 인권규약은 대강 2-5년 사이를 두고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늘 철저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2007년부터 유엔 총회가 도입한 보편적 정례 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System)에 매 4년마다 철저히 준비하여 인권 모범 국가로 거듭나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4년 전 8월과 작년 10월 2차에 걸쳐서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이 제도에 의해 우리가 준비한 4년 전의 연속선상에서 제출된 국가 보고서와 NGO에서 작성한 파라렐 보고서에 근거하여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우리나라가 준비한 국가 보고서외에 유엔현장, 세계 인권선언, 우리가 가입한 조약기구에서의 의무규정, 국제법상의 인권법, ILO 규약, 제네바 컨벤션 4개 그리고 우리가 인권이사국으로써 출마할 때 약속한 사항들을 통틀어 전반 적으로 검열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속히 인권교육법을 법제화해서 유엔의 각 인권 메커니즘이 원하는 경지까지 한국 인권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교육법의 법제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환점으로 대한민국에서 복지 바람이 불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모든 정치권이 ‘복지국가’를 내세웠다. 금세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할 분위기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복지공약이 축소되고 예산 압박 논란도 불거지면서 ‘복지 바람’은 다소 잦아지는 추세다. 7월 기초연금 시행으로 2010년 이후 시작된 복지 운동은 하나의 순환을 마무리하는 듯하다.

지난 복지국가 운동을 어떻게 평가할까? 논의 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를 잠정적으로 ‘복지 시즌 1’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시즌 1은 ‘복지담론’을 지렛대로 복지국가로 도약하려는 ‘기동전’의 성격을 지녔다. 아직 여러 복지인프라가 충분히 성숙되진 않았지만 복지바람으로 위로부터 구조적인 전환을 이루고자 했다.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한껏 발휘된 시기다. 이와 비교해 지금부터는 ‘시즌 2’가 시작되는 듯하다. 시즌 2는 그만큼 복지를 둘러싼 지형이 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 복지의 세 가지 유형과 특징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다양하다. 우리나라도 약 300개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각 유형별 특성과 과제를 살펴보자.

〈표 1〉 우리나라 복지 유형 및 논점

구분	제도	특징	적용 과정	논점	과제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등	취약 계층	상향식	급여 수준	재정 확충
사회보험	연금, 의료, 고용, 산재 등	모든 계층	하향식	사각지대	노동시장 개혁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급식, 보육,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모든 계층	상향식	보편/선별 여부	재정 확충 인프라 공공화

첫째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료급여·자활 지원 등 빈곤 계층에만 제공되는 공공부조이다. 애초 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초기 영국에서 교회나 지역사회가 빈민들을 위해 벌인 구빈사업에서 시작되었는데, 점차 그 역할이 정부로 넘어오면서 국가의 복지사업이 되었다. 당연히 공공부조는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제공 여부가 결정되므로 선별 복지에 해당한다.

둘째 유형은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살아가지만 노동력이 항상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아프거나 다칠 수도 있으며, 언젠가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한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모두가 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보편 복지 방식으로 설계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라면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자영업자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셋째 유형은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이다. 이 복지들은 사회보험과 비교해 주로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재정이 주로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인 유아와 학생,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인데, 급식과 보육처럼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수당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학자에 따라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을 구분해 복지 유형을 네 가지로 정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공공부조는 원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선별 복지 성격을 지니기에 보편/선별 복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신 공공부조에서 제기되는 논점은 급여 수준이 적절한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계층은 없는지 등이다. 반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사회수당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보편/선별 논

쟁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벌어진 곳도 급식, 보육 등 사회서비스 영역이다.

각 복지는 자신이 지향하는 유형에 맞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선별 복지로서 저소득 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은 낮은 최저생계비 책정, 불합리한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보편복지 제도로써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포괄하는 게 최선이지만, 조건을 감안해 단계별로 발전하는 게 보통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역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시즌 1에서 사회서비스/수당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지만, 사회보험 영역에선 여전히 사각지대(불안정 노동계층)가 광범위하다.

이 때 사각지대 성격이 다르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하위계층이 사각지대이지만, 사회서비스(수당)은 상위계층은 사각지대에 있다. 우리나라 복지논쟁이 벌어진 곳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 노동자의 절반이 차별을 받는 사회보험 영역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사회수당에서 보편복지 전면화(상위계층 복지 확대)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다. 보편복지가 상위계층 복지를 요구하는 상황. 즉 부자집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논점이 생긴 이유이다.

2. 시즌 1의 성과

* 성과 1: 복지 체험

시즌 1의 핵심 의제는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논란에서 드러나듯이 '보편복지'로 집약될 수 있다. 2010년 무상급식을 계기로 등장한 보편복지 담론은 2012년 선거 공간의 에너지를 담아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가 확대되었다.

중간계층 중심으로 의미 있는 복지체험도 진행되고 있다. 보통 시민사회에서 '선복지 체험'을 강조하는데 양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해야 복지체험일까? 나는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영역에서 의미 있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복지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복지체험은 질적인 범주다. 이는 '복지가 늘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그리고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확인될 수 있다.

* 성과 2: 복지인식의 변화 (시혜 →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인식이 생기고 있다. 과거에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시

해'일 뿐이었다. 복지를 받는 사람에겐 실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부여됐다. 하지만 보편복지 바람이 불면서, 급식, 보육, 의료,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등에서 사회적 이유를 가진 요구가 등장했다. 복지가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복지 권리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동, 공존, 연대 등의 가치를 토대로 삼는다. 대한민국을 재디자인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3. 시즌 1의 한계

* 한계 1: 복지재정 장벽 방치

보편복지는 사회서비스/사회수당 분야에서 상위계층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자 했다.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보육, 재벌 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줘야하느냐는 논란이 생긴 이유다. 보편복지 세력의 주장은 스웨덴 학자 코르피(Walter Korpi)의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 이론에 근거를 둔다. 단위예산당 재분배효과는 선별복지가 크겠지만, 보편복지는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재정을 늘리기에 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시즌 1에서 한국의 보편복지는 급식, 보육 복지에서 보편 복지를, 기초연금에서 준보편복지를 이루었지만, 복지재정 확충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복지재정 확충에 소극적인 박근혜정부의 출범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야권, 보편복지 세력 역시 재정책확충방안이 취약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한계 2: 복지의 불균등 발전 - 약자복지 방치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계속 방치되고 있다. 시민들이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누리게 되었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에게 빈약했던 복지는 그대로이다.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는 공공부조 복지가 그 자리에 묶여 있다. 2008~2013년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3%였지만 정작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이보다 낮은 3.5%에 그쳤다. 올해 세 모녀 죽음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부산을 떨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초생활보장 개정안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줬다 뺏는' 연금으로 방치된 것도 그러하다.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취약계층 자체복지도 빈약하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국고보조 복지사업에 대응 예산을 대느라 주로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자체 복지는 2009년보다도 줄어들었다. 행정부가 복지예산 압박을 공공부조 복지와 지방정부로 전가한 탓

이다. 7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 재정부담도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추가돼, 향후 지방정부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만큼 지자체 자체복지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도 심각한 상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그것이다. 근래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일반예산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여전히 사회보험에 기둥을 두고 있다. 전체 복지 분야 지출에서 사회보험이 65%를 차지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 연금 증가로 2050년에는 80%까지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시즌 1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공론화조차 되지 못했다. 불안정노동자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노동복지에서도 심각한 격차를 당하고 있다.

* 한계 3: 대중적 복지주체 미형성

복지국가를 자신의 권리와 책임으로 느끼는 복지시민이 주체로 형성돼 있지 못하다. 복지는 재분배영역, 즉 정치 영역에서 치열한 계층 갈등을 수반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대중주체의 형성이 핵심이다. 서구에서는 노동조합이 핵심 주체였고, 복지정당을 통해 자신의 복지 욕구를 현실화했다. 아직까지 한국은 서구의 복지주체 형성 경로를 보여주지 못한다.

시민사회도 중요한 복지주체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복지주체로 보기 어렵다. 시민단체들 역시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판이 있듯이 공중전을 벌이는 이슈집단 성격이 강하다. 2011년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 주요 지도급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하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도 이전만 못한 상태다.

다양한 복지관련 주체들 역시 그러하다. 약 10만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직 세력으로 칭하기는 어렵다.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제가 취약계층을 만나는 복지현장과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장벽에 갇혀 있다. 공공부조 수급자나 가족들 역시 복지주체로 나서기에 여러 어려움을 지닌다. 국가에 생활을 의지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정작 복지를 누리게 된 주체들 역시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급식, 보육, 기초연금 영역에서 복지가 확대되면서 엄마, 노인이 핵심 이해관계자로 호명되지만 이 집단 역시 조직적 세력으로 형성하기에 한계를 지닌다.

4. ‘시즌 2’를 주도한 의제들

이제 복지 의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 바람을 일으키는 핵심 의제도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 시즌 1에서 논의를 주도했던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은 일정한 제도 위로 올라 서 당분간 다시 꺼내기가 어려운 상태다. 다른 복지 영역도 이미 박근혜 정부가 한차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다시 핵심 의제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근거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등 중요하지만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제들도 있다. 복지 현실과 의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즌 2에 조응하는 핵심 의제 기획이 필요하다.

* 진지전: 의제와 주체를 키워가야

복지국가 재정과 주체에서 활로가 필요하지만, 모책은 없다. 한국과 같이 조세 저항이 강한 곳은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하나씩 벽들을 쌓으면서 복지를 자신의 권리와 책임으로 공유하는 대중적 복지주체도 커갈 것이다.

시즌 1은 다이내믹 코리아 방식으로 위로부터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기동전’의 모양새를 띠었다. 이제는 복지정세가 변하고 있다.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인프라, 대중적 복지주체를 만들어가는 ‘진지전’이지 않을까. 앞으로는 큰 ‘복지담론(예 보편 복지)’이 힘을 발휘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의제가 기획되고, 이 의제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대중적 복지주체(예: 의제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복지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 기존 보편복지 의제(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중장기 인프라 개혁으로..

시즌 1 보편복지 담론 시기에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의제가 중심에 있었다. 이 영역에선 상당한 성과가 이미 이루어졌다. 급식, 보육은 사실상 보편복지로 자리 잡았고, 기초연금은 (향후 물가 연동으로 약화되지만) 단기적으로는 70% 노인에게 제공되는 준보편복지로, 최고 2배가 오른 20만원 복지로 강화되었다.

따라서 당분간 이 영역에서 복지 강화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큰 홍역을 치루며 일 단락된 기초연금을 단기간에 다시 손보기 어려울 것이고, 2012년 선거공약에서 선보인 아동수당이 의제가 될 수 있으나 무상보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등장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반값등록금은 거의 도입되었고 고교무상교육도 박근혜정부에서 진행될 예정). 이 영역은 모두 세금복지여서 예산 확충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결국 당장 현금복지를 강화하는 사회수당 분야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프라 정비

가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보육, 요양이 소규모 민간 인프라에서 전달되는 현재의 체계는 예산효율성, 복지서비스 질 관리 어느 면에서도 적절치 않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더라도 중장기적 시야에서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 의제가 다루어져야 할 때이다.

*** 집중 의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 (공공부조)**

시즌 1에서 공공부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제, 주거복지가 대표적이다. 복지발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의제들이다. 당장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영역에서 복지수준 강화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 확대의 가시적 성과를 공공부조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 개혁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서자. 8월 현재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야가 획기적인 개선 결과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 혹 이번엔 기초생활보장법이 졸속 통과되더라도 꾸준히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문제를 부각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주거빈곤의 문제도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이는 방치되었던 공공부조를 제자리로 놓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복지주체 형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노동조합 등 조직세력들이 복지주체로 나서기 어려운 대한민국 구조에서 사회복지사, 복지관, 지역공동체는 중요한 네트워크형 복지주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 독립 의제: 건강보험 하나로 (보험료 인상을 통한 사회연대적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은 다른 복지와 비교해 독자적 성격을 지닌다. 형식은 사회보험이지만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다. 노동복지보다는 시민적 보편복지에 가깝다. 규모도 연 40~50조원으로 우리나라 복지에서 넘버원이다. 시민들이 체감도가 높고 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더욱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알아가고 있다.

남는 문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형평성, 과잉진료 우려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서라도 보장성을 올리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지닌 폭발성은 매우 크다. 이는 2010년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확인된 가능성이다.

당장 건강보험료 인상을 제기하는 투박한 방식보다는 시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활동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공론화하

고, 과잉진료 개선, 비급여 보장성 강화, 지방 공공의료기관 유지 등 여러 보건의료 활동이 필요하다. 여기서 쌓인 신뢰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 의제'를 부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재정 의제: 사회복지세 도입 (복지에만 쓰는 복지목적세)

모든 복지는 재정 확충을 필요로 한다. 박근혜정부조차 자신의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조만간 간접세 중심의 증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보편복지 세력 역시 증세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

보편복지세력의 전통적인 증세방안은 “1% 부가증세”이다. 시간이 흘러 부가감세 철회라는 포괄적 요구보다는 법인세, 자산세 중심의 증세요구가 등장할 것이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등에서 제안하는 사회복지세 방식의 “복지증세”도 주목하자. 사회복지세는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로서 부가증세 성격을 지니는 누진증세, 시민이 함께 나서는 참여증세이다.

* 잠재 의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 사회연대전략(사회보험 지원)

사실 규모에서, 파급력에서 가장 막강한 복지 의제는 사회보험이다. 그만큼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사회 시대적 과제인 비정규직 의제와도 곧바로 결합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제도 형식으로는 사실상 완성되어 있으나, 사회보험이 서 있는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까닭에 애초 설계도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문제가 사회보험으로 전가된 것이기에 해법이 사회보험 제도 내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 시즌 1에서 사회보험이 부상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가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비정규직 의제이기 때문이다. 복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은 '보험료 지원'이다. 이명박정부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 보험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험 재정도 확충해 가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관건은 고용보험이지 않을까(국민연금은 아직 제도 불신이 커 보험료 의제를 꺼내기 어려움). 고용보험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당연히 불안정노동자이고, 상대적으로 중심에 있는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노동자 연대가 어렵지만, 그만큼 의미는 크다.

5. 제안: 복지시민이 주역으로 나서야

위에서 살펴본 모든 의제들은 ‘아래로부터 주체 형성’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공공화는 해당 종사자와 수급자가 주체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둔 공공부조 의제는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지역공동체가 주체이다. 건강보험하나로는 병원비를 걱정하는 다수 시민이 주체이고, 사회복지세 역시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이 주체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조직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가 주체이다.

특히 나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지역(마을)의 등장에 주목한다. 근래 공간을 거점으로 형성되는 지역NGO,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 민주화에 따른 지역참여 정치가 활성화되고, 이미 생활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이 몇 곳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지역 주민들을 모으는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풀뿌리 지역 주체들이 벌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역협동조합’ 등은 복지국가의 모세혈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한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복지망을 촘촘히 만드는 활동을 벌이고, 다른 한편 복지제도 개혁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드는 복지시민이 커가고 있는 것이다.

서대문구에 세우는 인권도시

— 공간 이데올로기 : 옥에서 옥을 보다

서해성/ 소설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하나의 공간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집행한다. 이데올로기 집행기구로써 그 공간은 성립과 함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켜낸다. 대중은 공간을 출현시킨 그 이데올로기보다 도리어 일상을 통해 대체로 그 공간이 잉태하고 뿜어내는 이데올로기에 이윽고 포섭된다. 이는 인격보다 강렬하고 지속적이고, 굳이 말해 남근적이다. 모든 권력공간은 자연상태의 대지에는 다분히 폭력적으로, 대중에게는 기념비적으로 군림하면서 기억을 지배한다.

전통적으로 종교시설은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였다. 우리춤이란 무릎 아래 복종을 위로 향해 절대관념화한 것일 뿐이다. 이는 상대성을 거세함으로써 신성스러움을 강제한다. 경배공간은 이를 조형적으로 체계화해왔다. 이 과정을 통해 공간의 내면성이 발생하고 지속화한다. 흔히 보는 고딕양식교회나 불교 탑과 형식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통치와 관료기구와 체제를 섬기도록 유도해온 중세 권력기구 또한 근본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왕궁은 왕이 사는 곳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불가촉 영역이었다. 이는 지방 통치기구에서 강약의 차이를 두고 답습되었다. 식민지 지배와 함께 한반도에서 봉건통치 공간은 개방, 또는 해체되었다. 이는 왕실 통치의 소멸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에게 그 실상을 두 눈 똑똑히 확인시키는 과정이었다. 서구에서는 대궐 구경이 시민계급의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개방된 봉건시대 최고 통치공간이 베르사유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 권력기구에 대한 상징은 식민지 시절 다른 형태로 강화되었다. 이방에서 들어온 공간은 문명의 이름으로 지배적 위치를 점했다. 식민통치기구인 총독부, 시청사(경성부), 병원(경성의전), 학교, 기차역은 대개 네오 르네상스 변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문명성과 위생의 의미를 건물 자체를 통해 대중에게 훈육해왔다.

봉건 유교 교육시설인 성균관과 향교가 문묘와 함께 배치된 것은 교육이 숭배와 연동되도록 애초에 의도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음덕' 없는 교육이란 후레자식과 다르지 않았다. 유교에서는 생부만이 아니라 학문의 아버지 또한 극히 중요한 경배 대상이었다. 하물며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사후 문묘에 배향되는 일이었다.

유교에서 교육과 종교는 하나였던 것이다. 이를 매개하는 것이 제사였다. 유교 조선은 3가지 제사를 기초로 운영되던 국가였다. 여염에서는 가묘家廟(사당), 학문에서는 문묘, 왕실에서는 종묘라는 제사공간이 이데올로기의 거처였다. 이는 군사부일체라는 봉건 가부장 권력의 문화적, 심리적 복종장치였다.

옥은 처벌과 처형을 위한 유치나 구금 목적 성격으로 운영되었다. 유학자 사회인 조선 통치계급의 옥에 대한 철학적 기초는 '성인이 형을 만드는 것은 형으로 백성을 다스리려는 게 아니라 한 방편에 불과하다. 형의 목적은 형이 없어지게 하는 데 있고 정치의 목표는 형을 사용하지 않는 데 있다'는 정도전의 말에 응축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국가권력이 옥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 하는 가치 지향점을 유감없이 명확히 하고 있다. 서대문옥에 투옥된 적이 있는 김구의 언설은 이와 닮아 있다. '독립한 후에 감옥 간수부터 대학교수의 자격으로 사용하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국민의 일원으로 보아 선으로 지도하기만 주력하여야 하겠고, 일반사회에서도 입감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대학생으로 대우하여야 그만한 가치가 생기겠다.' 백범의 글에서 알 수 있듯 조선의 옥이나 일제의 옥에서 형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조선의 범죄자(용의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다섯 종류였다. 태형苔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신체형을 대신하는 속전贖錢도 있다. 이는 벌금과는 다르다. 명예형으로 특별히 팽형烹刑이, 일시적으로 시행된 적 있는 목형墨刑 등도 있다.)(대명률에 규정한 五刑). 몸을 때리는 형벌은 두 종류였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형벌, 멀리 보내서 정치적, 관계적 거세를 시키는 형벌, 목숨을 앗는 형벌이었다. 형조, 의금부, 한성부, 사헌부, 병조, 승정원, 수령 등 직수아문에는 두루 옥이 있었다. 형조의 전옥은 구금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고려 이래로 전옥(서)典獄(署)라 했다. 종로를 사이에 두고 의금부義禁府 건너편에 이 옥(서린방瑞麟坊)이 있었다. 처형 장소는 여러 곳이었다. 때로 효수 당한 자 머리를 군문에 내거는 군기시는 전옥과 더불어 봉건시대 공포통치의 상징이었다. 돈의문 너머에 있는 처형장 이름이 고태골이었다. 여기서 '골로 간다'는 말이 나왔다. 거기서 머잖은 곳에 근대 옥이 들어선 것이다.

근대 감옥은 생산력 중심사회인 산업사회에서 비생산적인 대상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가려내 수용하는 개념으로 출현했다. 권력은 '우범자' '범죄자' '범행(재범) 가능자' 등을 분류해냈다. 이때 권력이란 단지 국가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본주의 생산체제 내에서 생산력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생산력을 방해하거나 다른 형태의 생산력을 도모하는 자, 내지는 그렇다고 간주할 만한 자들이었다. 군대와 경찰과 함께 근대 국가 폭력기구인 이 옥을 통해 완성된다. 이는 전염병을 관리하는 위생경찰, 한센병환자 등을 격리하는 국가질병관리 개념, 정신병자라는 모종의 기준을 내세운 감금 등과 함께 동행하면

서 근대적 힘으로 작동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생산력이 없거나 생산력을 소모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존재들이라는 판단이었다. 전과자라는 말이 도태, 거세 등을 내포하는 뜻으로 관습화되어 온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는 일본과 일본의 영향에서 근대 옥문화를 형성시켜 온 한국에서 유난하다.

직접적으로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질 않는 이른바 사상범이 중형을 받고 수용되는 까닭은 조금 다른 데 있었다. 이들은 생산력 증감보다 위험한 생산 결과물의 분배에 관심 갖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사상범은 버려지보다 못하거나 악귀에 가까운 자들이었다. 훗날 제3세계라고 부르게 된 피식민지 출신들이 자주성을 주장하는 독립/해방운동은 제국주의 생산력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결과를 유린하고자 하는 '약탈자들'인 셈이었다. 이들은 한낱 '게으름이 몸에 배인 자들/게으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지르는 생산력을 쪼먹는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들은 목적의식적이었고 그런 만큼 신념에 따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옥은 이들을 격리시켜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설로 탄생했고 기능했으며, 고문 등 공포와 열악한 시설은 '골병과 콩밥'으로 상징할 수 있는 버림받은 공간이라는 대중인식을 널리 퍼뜨렸다.(참고로 일제가 콩밥을 수인들에게 먹일 수 있었던 것은 만주 지배의 성과물이었다.) 이는 중세에는 없는 대중적 공간개념이었다. 애초 경성감옥은 500명 기결수既決囚를 수용할 목적으로 560여 평 목조건물을 지었던 것인데 이는 당시 대한제국 전체 감옥면적 1,000㎡의 2배 이상이었다는 것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옥은 한양을 빼면 대부분이 지방 관아 안에 있는 별로 크지 않은 원형(신라 이래 한반도의 옥은 원형)의 기와집들이었다. 대략 3백여 옥이 감영, 군현읍마다 산개되어 있었다. 감옥(1894년 갑오경장 이후 일본에서 수입한 말)은 생산력 중심 국가의 지배이상을 실현하는데 방해되는 자들을 거세시키면서 동시에 국가의 폭력적 위력을 상징하는 이데올로기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 서늘한 공간 이데올로기는 한반도에서 적어도 1백 년 이상을 군림해오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옥담 안에 갇힌 자들이 옥을 세운 목적대로 순응한 것만은 아니었다. 범털들이나 개털들이나 두루 빵간을 '대학' 또는 '국립호텔'로 간주해왔다는 것은 교도행정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지점을 역설하고 있다. 징벌이라는 국가의 복수에 기초한 형벌체제에 대한 효과 문제는 근대 옥이 등장한 이래 논쟁을 거듭해오고 있는 중이다.

근대 옥에서 뺄 수 없는 문제는 국가와 개인의 신체에 대한 문제다. 토지에 긴박하게 종속된 농노는 영주에 귀속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자본사회 특성인 자유노동이 생산체제 특성상 반드시 필요했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 이 또한 공짜로 얻어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자유 임금노동자의 존재는 노동의 유동성, 또 고용불안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세습신분체계가 법률적으로

해소된 자유인들인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자유권을 대등하게 획득한 자들이었으므로 의무 또한 균등하게 저야만 했다. 납세, 병역, 교육, 근로의 의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순환적 관계로 '농노'를 근대화, 곧 국가로 강력하게 귀속시켰다. 국가는 주권자라 부르는 대중 집합을 학생, 군인, 노동자, (또 납세자)로 순차적으로 집체화해왔고, 범죄란 고도의 집약적 생산체제인 이 순환관계망을 어지럽히는 행동들이었다. 가장 선량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근대 옥은 이들을 다시 생산체제에 투여할 수 있게끔 하는 (예비)노동학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개별자로서 주권자의 존재는 박탈되고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신체는 철저히 규율에 의해 작동하는 단백질 기계로 전환된다. 이것이 자유형이라 부르는 형벌의 요체다. 이는 국가가 그 구성원이자 주권자인 신체를 잠정적 또한 사형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회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형벌의 효과논쟁과 더불어 국가의 주권자 신체에 대한 차압권이 최소한적, 방어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질문과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형틀, 토색질, 질병, 굶고 배고픔, 오래 갇혀 있는 고통 등 다섯 가지(옥중5고獄中五苦)를 겪어야 하는 옥을 이승의 지옥(목민심서)이라고 한 정약용의 지적은 형태가 전이되었달 뿐 여전히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대문형무소를 '서대문 우리'라고 한 권오설의 말은 일제강점기 옥의 성격만이 아니라 인권 없는 김승 같은 생활에 대한 통렬한 비아냥이다. 수감, 이동, 취침, 냉난방, 노역, 운동, 음식, 질병, 변소, 면회, 대화(통방, 패통), 독서, 편지쓰기를 포함한 집필 등 일상, 감시, 고문 등에서 옥은 세상에 존재한 이래 역사와 인간의 음지를 벗어난 적이 없다.

한국의 옥을 상징하는 서대문 옥은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과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을 격리, 거세시키는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근대 대중 통제의 상징으로써 이데올로기를 음산하게 내뿜어왔다. 건립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근대화된 감옥이라는 일제의 자랑스러운 주장에서 볼 수 있듯 서대문옥은 식민지와 민주정체에 대한 억압을 두루 경험한 아시아의 저항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보편화하는데 가장 유력한 공간이다. 이는 한 동안 독립운동에 머물다가 민주화운동으로까지 주제를 확대해왔지만 여전히 한국이라는 제한을 스스로 두고 있고, 관람 탐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동하는 현재적 가치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 이곳에 실로 필요한 가치와 시설은 인권이다. 서대문옥에서 지난 1백 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은 한 마디로 줄이자면 반인권적 상황과 행위들로 켈 수 있다. 서대문옥의 공간 이데올로기를 '이승의 지옥'에서 아시아의 인권 중심공간으로 전환시켜내는 일은 감옥, 형무소, 교도소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넘어 이곳을 아시아의 성소로 재창조해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정이야말로 서대문옥 창살을 1백년 만에 밖으로 열어젖히는 일이다. 비생산적 공간이자 인권 막장 공간인 근대 고태골에 대한 성찰과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때다.

이데올로기 집행기구로써 옥은 수인에게 국가의 위력과 권세를 직접 행사해왔고 동시에 옥 밖에 있는 주권자인 광범한 대중을 예비 수인화하는 상징폭력을 오래도록 집요하게 행사해왔다. 옥의 높은 망루는 옥담 안을 감시하면서 그 상징성에서 옥 밖을 감시하는 일을 포괄적으로 수행했다. 국가의 감시공간에서 시민에 의한 아시아 전반의 국가폭력감시, 인권감시의 망루를 세우는 작업은 공간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이 대지에 대한 오랜 모욕을 청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서대문옥 이력

1894 '감옥(서)' 명칭 처음 사용(갑오경장)(전옥서典獄署를 감옥서로 개칭)

1907 한국통감부, 경성감옥 건립, 융희隆熙(순종) 1년.

*仁王山 기슭 金鷄山 자락. 간수 출신 일본인 시텐노 가즈마四天王數馬 설계, 대한제국 탁지부度支部 시공.

*500명 既決囚 수용 목적 560여 평 목조건물(전국 감옥면적1,000m²의 2배 이상).

1908 10월21일 典獄署 수감자 京城監獄으로 이감.

1912 西大門監獄으로 개칭. 경성감옥은 마포옥 이름이 됨.

1911 105인사건.

1919 일시에 3,000명 수용.

*18세 미만 少女囚 모두 수감

1923 5월5일 西大門刑務所로 개칭.

1935 未決囚 拘置監 시설.

1945 11월21일 서울형무소로 개칭.

*反民族行爲者 일시 수용, 독립운동가 다수 재투옥.

*50년대 수감자 70%가 좌익인사.

1961 12월23일 서울교도소.

1967 서울구치소.

1987 이전

1992 서대문독립공원

1998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마포옥

1912 경성감옥, 1923 경성형무소, 1946 마포형무소, 1961 마포교도소

2014년 제4기 서대문구 주민인권학교

- 제 작 2014년 10월 16일
- 펴낸곳 인권연대
- 연락처 인권연대

서울시 중구 동호로30길 13, 402호(장충동2가 주암빌딩)(우 100-855)

전화: 02-749-9004 팩스: 02-3672-0438

홈페이지: <http://www.hrights.or.kr>

이메일: rights1999@nave.com